

靑-野 '평양 선언 비준' 충돌

야 "효력정지 가치분 신청·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 靑 "야, 법리 오해... '비준 위헌' 주장이 위헌적 발상"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 야당 측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는 야당 측 주장이 오히려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완화에 속도를 내고, 이를 비핵화 추동력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구상이 법리적 논쟁에 발목 잡히지 않게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사합의서 비준을 비판하는 야당의 논리대로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고자 한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의 헌법 3조에 반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담아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 남북 간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남북합의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남북합의서가 헌법상 조약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판결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는 지난 1997년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문에서 "1991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 문서"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군사합의 비준에 대해 "모법(母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령을 먼저 만드는 것이고, 애 낳기 전에 출생신고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선행 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이 아직 비

준동의가 안됐는데 후속 합의인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를 필요없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며 "한국당은 어제 국무회의 심의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치분 신청을 포함해 야권공조를 통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靑 "2차 북미 회담 개최 합의 가시화"

청와대는 24일 북미 간 논의 중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의 제반 사항을 논의 중인 만큼 점차 합의가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또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김정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성격에 대해 김 대변인은 "큰 틀에서 분단 70년의 적대분열을 종식하는 과정"이라며 "(분열 종식의) 선결 과제로 비핵화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반복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파악하는 바가 없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가동은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개특위 첫 회의 ... 여야 "선거제 개편 최선"

심상정 위원장 선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로써 지난 7월 정개특위 설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래 석 달 만에 가동하게 됐다. 여야는 그동안 위원 정수를 둘러싼 입장차 때문에 특위 구성 자체를 하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오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3개 교섭단체 간사로 김중민(더불어민주당)·정유섭(자유한국당)·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을 각각 뽑았다.

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개인적으로는 3선의 위원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맡은 국회 지위"라며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이 마치 제게는 숙명처럼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3당 간사를 비롯한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도 앞다투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확고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 첫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 간사인 김중민의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비례성, 대표성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했고,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될지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지역

주의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당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정개특위만큼은 반란을 꿈꿨으면 한다. 정개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다면 각 당 지도부를 구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각각 말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전체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연말까지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체제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인물

MB정부 은폐 문건 확보·지역 발전 해법 제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24일까 지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흥무진 활약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송 의원으로서 이번이 첫 국정감사다. 그런데도 송 의원은 차분하고도 명쾌한 논리로 피감기관을 궁지로 모는가 하면 대안을 제시하는 노련함까지 보여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광주의 유일한 여당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송 의원은 지난 10일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동안 광주·전남에 지원되는 R&D 예산이 5년째 연속 쪼개'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배려 등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정부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 다음 날에는 4조원 적자를 내고 있는 하베스트 인수의 청와대 개입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화전당 주변 도로 소송 8년만에 해결 물꼬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실하고도 날카로운 문제 제기로 호평받고 있다.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 측이 이미 조감부 승인된 전당주변 도로 확장을 8년이 지나서 돌연 축소 요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형적인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문체부와 전당 측에 행정소송 취하 등을 강력하게 요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감에서 최 의원은 에어로빅 연맹이 유사단체를 만들



어 수년째 선수들과 심판들의 연봉을 착복해왔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한체육회에서 강력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밝힌데다 사법 당국의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체육계 전반의 적폐 정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지역 사회와 상생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며 융합교육원 설립 등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환노위 국감...산하기관 채용비리 '도마'

국회는 24일 기획재정부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기재위는 이날 인천세관과 인천항을 현장 시찰하고, 복지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환노위의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임직원들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또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한국기술 자격검정원이 산업인력공단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재고용된 검정원 직원 68명 중 6명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공단에 신규

채용됐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이중 일부는 공고 절차도 없이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이 남북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론타워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비핵화가 이뤄진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남북철도 연결은 그동안 사실상 '섬'으로 존재해 왔던 대한민국이 대륙과 연결되는 것이고 미래 한반도를 위한 투자"라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